

중국어선 몰려온다 서해바다는 초긴장

16일부터 '저인망 어선' 금어기 풀려 불법조업 극성 예고 단속 격렬 저항 中 선장 해경 총에 사망하며 '일촉즉발'



서·남해안 바다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출렁이고 있다. 오는 16일 중국 저인망(쌍타망) 어선 등에 대한 금어기가 풀리면서 황금 해역인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탐내는 무허가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기존 유자망 어선에 비해 기업형 규모의 대형 선단이 많은 쌍타망 어선이 허기도 없이 무차별 포획으로 치어나 나서면서 국내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린다 는 게 어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최근에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첩판을 둘러치거나 서로 밧줄로 연결, 거대한 선단(船團)을 이루고 단속에 저항하는가 하면, 어업허가증을 위조하거나 국내 단속경비정보보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중국 쌍타망 어선은 황금 어장이 형성되는 흥도 북서방 50마일 부근, 가거도 서방 40마일 부근, 전북 부안군 상

하용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이 올해 말까지 허가받은 어획량은 3만9079t에 이른다.

쌍타망 어선은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긴 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면서 어종을 가리지 않고 바닷고기를 잡아 대량 포획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어망 면적보다 훨씬 총중량 어망을 사용해 무차별 포획을 이끈다.

중국 쌍타망 어선은 황금 어장이 형성되는 흥도 북서방 50마일 부근, 가거도 서방 40마일 부근, 전북 부안군 상

왕등도 서방 60마일 부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촉즉발...중국 선장 사망=타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중국 쌍타망 어선이 불법 조업에 나섰다. 단속에 걸린 뒤 격렬한 저항을 하다 선장 송모(45)씨가 해경 총에 맞고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6시께 태안해경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합동단속 중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방 70마일(우리 측 어업 경계선 내 13km) 지점에서 무허가 쌍타망 어선 20여척을 발견, 한 척에 대한 10명인 승선, 나포하던 중 인근에 있던 배에서 수십명의 중국 선원들이 몰려와 격렬한 싸움이 시작됐다. 빼앗긴 배를 되찾으려고 저항하던 중국 선원과의 다툼 속에서 해경은 공포탄 3발과 실탄 7발을 발사한 뒤 제압했던 불법 어선까지 포기하고 철수하는 '물욕'

을 당하기도 했다. 총상을 입은 중국어선 선장 송씨는 함정에 있던 헬기로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부실한 장비에 미흡한 매뉴얼도 문제=해경은 지난 10일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기존 10인승 고속 단정이 고장나 8인승 배에 9명이 탑승, 단속에 나서는 아찔한 '도박'을 감행했다.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촬영 장비를 갖추고 임하게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채 작전에 나서는 '미흡함'도 보였다. 지난 2011년 '정부의 불법 조업 근절 대책'에 따른 고속 단정(10m급) 교체 계획도 여전히 진행중이며 진화하는 저항 방식에 대한 매뉴얼도 확립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영·호남 교육지도자 상호 교류 한마음 전남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0~11일 이틀간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장만채 전남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전남·경북지역 4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교육지도자 상호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영·호남 교육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와 교육정보 교류·소통으로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1사단 해안경계 레이더기지 21곳 무용지물 선박자동식별장치 없어 신속 확인·대응 못해

육군 31사단이 전남 지역 해안 경계를 책임지면서도 정작 우리측 해역을 침범하는 적 선박을 신속하게 확인,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선박자동식별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선박 감시 등을 위해 레이더 기지를 조성한 반면, 갖춰야 할 선박자동식별장치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국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2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AIS 수신기 군 레이더 기지내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31사단 예하 레이더 기지 21곳에 설치될 선박자동식별장치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100t급 이상의 선박에 탑재돼 선박위치·질로·속력·선명·목적지·국적 등 항해 정보를 1분에 5~6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세월호 침몰 당시

해당 선박의 항적을 확인하는데 사용됐다.

군 당국은 레이더 기지를 갖췄지만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정작 필요한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없다보니 때때로 의심 선박을 확인한 뒤 해양경찰 또는 해군에 전화로 추후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레이더 기지 한 곳당 하루 평균 700척 가량의 선박 식별업무(11시간40분 소요)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제대로 된 우리측 해역 내 선박 감시활동 및 방어 작전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31사단과 달리, 53사단의 경우 레이더 기지 6곳에 수신기·안테나 등 한 대당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AIS 6대를 모두 설치, 레이더 기지 사각지역의 선박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31사단측의 부실한 레이더 기지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감사원, 해경 간부 4명 해임 등 50여명 중징계 촉구

세월호 부실 구조 책임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 조사 과정에서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해양경찰 관계자 등 5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여객선 안전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미흡한 사고 초동 대응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세월호 운항 문제와 맞물리면서 29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과 해양경찰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간부 4명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지휘 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김석균 해경정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인사 자료로 통보하는 등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사실상 김 해경정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사원은 또 '국민안전 종합대책', '재난 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인적 재난 총괄 기능을 안전행정부로 이전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이전되지 못하는 등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를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도 주의 요구 조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낙연 지사 '선거법 위반' 조사

이낙연 전남지사가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순천경찰청은 이 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7시 경찰서 지능실에서 3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참석,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인 뒤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 지사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해 이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하루 전 출석 날짜를 통보해주겠다'는 이 지사 측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다 주말 밤 시간을 틈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노회용 동구청장 오늘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용 광주동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13일 열릴 예정이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노 청장의 선고 공판이 13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에서 열린다.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노 청장은 기존 재판과 달리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월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로또 당첨자 돈 살포' 소문에 광주 도심 한바탕 소동



○...로또 당첨자가 광주 시내 커피전문점 옥상에서 당첨금 일부를 뿌린다'는 SNS 게시글이 퍼지면서 해당 커피전문점 주변에 수백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등 한바탕 소동.

○...1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상인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동구 금남로 2가 D카페 옥상에서 누군가 현금 30만 원 상당의 1000원·5000원 짜리 지

폐를 뿌렸다는 것.

○...전날 페이스북 '광주 맛집 여행 게시판'에 '○○카페 옥상에서 로또당첨금이 돈을 뿌린다'는 게시글을 본 네티즌 300명이 이날 해당 카페를 찾으면서 일대가 마비되는 등 주변 상가 주인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한 상가 주인은 "해당 카페 주인이 홍보이벤트를 한 것 같은데, 사장은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공동 투자자 모심

- 1억원 이상
- 연 수익률 20%이상 보장
- 소유권/근저당 으로 보장